

● **고시 20% 지방인재로 뽑는다**

행정 및 외무·기술고시에서 지방소재 학교 출신을 최대 20% 정도 뽑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2007년부터 도입된다. 5일 중앙인사위원회 및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따르면 5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 학교(고졸 및 재학생·중퇴자 포함, 대학원은 제외) 출신이 정원의 20%에 미달할 경우 정원의외로 지방학교 출신을 추가로 뽑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확정했다.

하지만 헌법상 평등 원칙과 공무원 채용의 실적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추가 합격선을 마이너스 1점 이내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2003년 106명을 뽑은 행정고시의 경우 5명 정도의 지방학교 출신자가 추가로 합격된다.

정부는 5급 공채는 지방학교 출신이 13% 정도에 불과하나 7·9급 공채는 지방학교 출신 합격률이 42~77%에 달해 5급 공채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학교란 교육법상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소재한 학교로 서울 소재대학의 지방분교는 지방대학에 포함되고 방송대는 지역대학 및 학습관에 등록된 학생, 독학사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초·중등 학력이 지방이면 인정하기

로 했다.

또 지방대 졸업후 서울소재 대학에 편입한 학생은 지방대에 포함되지만 서울소재 대학 졸업후 지방대에 편입한 학생은 졸업자만 지방대 출신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추가로 선발된 이들은 일반 5급 고시 합격자와 똑같이 지역제한없이 근무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본 뒤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인 지방인재 할당제도의 위헌요소를 보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해 서울 소재 군소대학의 반발과 일부 위헌 요소 등으로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 **교사되기 어려워진다...교직 과목 이수 20 → 33학점으로**

2007학년도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직과목 이수학점이 20학점에서 33학점으로 늘어나 비사범대의 교직과정이나 교육대학원을 통해 교단에서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 현재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를 도입해 기준 미달 대학은 양성기능을 제한 또는 폐지하고, 양성기간도 4년에서 5, 6

년으로 늘려 전문대를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4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2005년 1월 말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 마련은 교원자격을 취득하는 교육과정과 자격검정 기준이 느슨하고 교원양성기관도 기준 없이 방만하게 운영돼 자격증이 남발되고 결국 교사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 최소 기준과 신규 교사의 자질 및 능력 등을 규정한 국가 기준이 마련되면 교원양성기관이나 교직과정이 대폭 정리돼 초등교원 임용 경쟁률이 현재 1대 1에서 1.2대 1로 높아지고, 중등은 3.5대 1에서 2.5대 1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교생 실습기간은 초등은 현행 8~11주에서 15주 이상으로, 중등은 4~6주에서 8주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현장적응 교육이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제를 2009년부터 도입해 교수확보율, 임용률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폐지하거나 교원양성기능을 제한하

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양성체제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양성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거나 대학 졸업 후 2년간의 전문대학원을 합쳐 6년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2010년까지 확정짓기로 했다.

이 밖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선발방법도 개선해 2008학년도 임용시험부터 2단계 전형에서 3단계 전형으로 늘려 교사 자질을 평가하되 1차 필기시험의 비중은 55%에서 35%로 낮출 예정이다.

●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확정

연구중심대학 육성, 연구기획평가사 제도 도입, 이공계 인력 종합정보체계구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심의를 통해 확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이공계 육성을 위해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며,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기부)은 연구중심대의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업 계획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선정 육성토록 했다.

또 연구개발(R&D)의 기획, 자문, 평가 등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연구기획평가사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마련되는 국가자격증 제도로 이공계 외 인문사회 등 타 영역도 포괄하며, 첫 시험은 시범과목 등 세부 규정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이공계 인력의 취업과 재취업 알선 방안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도에 '이공계 인력중개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설치 운영토록 했다.

이와함께 연구개발업과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해, 연구개발업자는 이공계 인력 10인 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2인 이상, 연구개발지원업자는 이공계 인력 2인 이상 또는 연구기획평가사 1인 이상을 확보한 업체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이공계 인력의 채용조건, 급여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해 과기부가 이공계 인력 종합정보체계를 구축, 관리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 전문인력 공급·양성 방안을 강구해 차세대 성장동력사업과도 연계토록 했다.

시행령은 이외에도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 인력을 선정하기 위

해 '핵심 이공계 인력 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구개발 성과와 국가공헌도에 따라 연구장려금을 지원토록 했다.

● '신벤처정책' 내년초 추진... "대학이 직접벤처창업·경영 유도"

정부가 '제2벤처붐' 조성을 위해 2005년 초부터 시행하는 신벤처정책은 대학기반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12월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대학내 창업인큐베이터를 적극 지원하고 대학내 창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특히 "중국에서 대학이 직접 사오반(校辦)기업을 설립해 운영하는 방식의 벤처정책을 벤치마킹해 한국에서도 대학이 직접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의 대학내에 창업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이곳을 졸업 한 학생들이 벤처창업을 하는 것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대학기반 벤처창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창업 ▶성장기 ▶인수합병(M&A) ▶구조조정 등

의 단계로 나누어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벤처캐피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투자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현재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과 함께 신벤처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벤처정책을 수립중이며 연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신벤처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민간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 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생성되고 소멸되는 건강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학과 벤처캐피탈을 공동으로 지원해 연구와 기업활동이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전한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아 과감히 도전하는 정신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신벤처정책에 대해 과거처럼 대박의 환상을 좇는 벤처열풍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김 청장은 벤처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인케(INKE;한민족 글로벌 벤처네트워크)를 자본금 10억원 규모로 법인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케는 국내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

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독일 영국 등지에 18개 해외지부를 두고 있다. 2005년에 중남미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8개의 해외지부를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이들 해외지부에서는 현지의 네트워크거점이 돼 한국 벤처기업의 수출은 물론 합작투자, 해외자금유치, 공동마케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김청장은 “코스닥시장의 진입요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면서 벤처기업들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판단, 재정경제부 등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약 3조 원 어치 가운데 2조6천억 원어치가 미공개주식이나 상장오전 강화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투자, 기업 공개를 통한 투자회수, 재투자 등으로 이어지는 벤처캐피탈 시장의 선순환구조가 깨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청은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서울의 테헤란밸리가 주도하던 벤처 집중 지역을 안양 등 서울 외곽도시와 지방도시로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창업

지원법을 개정, 현재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65개 벤처창업 승인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괄처리해 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밖에 김청장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M&A활성화를 위한 세제감면 ▶기술 및 경영 혁신 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투자유치 ▶혁신선도형 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국내·외국대학 공동학위제 도입

외국 대학교수의 국내 온라인 강의와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간 공동학위제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강의는 하지 않고 연구에만 주력하는 연구전담교수, 연구원 등의 임용이 허용된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행정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3일 이해찬(李海贊)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외국 대학교수는 ‘직접 강의’만 할 수 있었으며 공동학위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기획단 관계자는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범위를 확대하되 운영방법과 학위 수여 여부, 명칭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조실은 또 '파견기간 1년에 1회 연장 허용'으로 이뤄져 온 대학교수의 외부기관 파견제도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직 연구소 기업근무를 위한 휴직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 KAIST·서울대·향원대 등 추가 지원

BK 21 제2차 중간평가 결과 과학기술·인문사회·지역대학 육성 분야 등에서 사업비가 삭감된 사업단은 23곳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들 사업단에서 모두 51억 2천6백만 원을 환수했다.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서울대가 사회기반 및 건설기술·화학·생물 등 3개 사업단에서 10억 4천9백만 원을 감축당한 것을 비롯해, 포항공대 정보·생물 9억 6천3백만원, KAIST 기계 7억 7백만원, 고려대 지구과학·정보기술 3억 8천4백만원, 연세대 물리 2억 4천5백만원, 한양대 재료·기계 2억 3천7백만원, 성균관대 생물 5천9백만원, 광주과학기술원 기계 5천8백만원 등 13개 사업단에서 10~20% 삭감됐다.

삭감 사업비는 다른 사업단에 추가 배정돼 서울대는 기계·지구과학·물리·정보 분야에서 모

두 17억 3천4백만 원을, KAIST 재료·화학·생물·정보 13억 7천1백만원, 경북대 기계·정보기술 3억 1천5백만원, 광주과학기술원 생물·정보기술 2억 2천만원, 연세대 수리과학·한양대 사회기반 및 건설기술 각 3천1백만원 등을 추가로 받았다.

인문사회분야에서는 이화여대 언어학·거버넌스, 서울대 한국법, 성균관대 직업연구인력 등 6개 사업단의 예산을 10~20% 삭감하는 대신 고려대 한국경제·동아시아에 2억 1천7백만원, 성균관대 유교문화·아동 7천5백만원, 대구대 특수교육 2천4백만원 등 5개 사업단의 사업비를 10~20% 증액하기로 했다.

지역대학 육성분야에서는 충남대, 강원대, 동아대, 강릉대 지원액이 20%씩 줄어드는 대신 창원대 4억 4천6백만원, 경상대 4억 2천8백만원, 인제대 1억 1천9백만원, 금오공대 1억 1천7백만원 씩 지원액이 늘어났다.

또 지난해 신규로 선정된 사업단을 대상으로 한 연차평가에서는 포항공대 4천8백만원, 충북대 2천8백만원, 한양대 2천6백만원, 연세대 2천4백만원, 서강대 2천만원 등 26개 사업단이 지원비를 감축당했다.

반면 인하대 5천2백만원, 성균

관대 3천2백만원, KAIST 3천만원, 광운대·부산대 각 2천8백만원 등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 김원찬 학술정책과장은 "지난 99년 사업 공고때 중간평가에서 사업단별 상대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조정하기로 했었다"면서 "성과가 부진하지 않더라도 상대평가를 하다보니 사업비가 삭감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까지 BK21 사업이 끝나면 2006년부터 '2단계 BK21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05년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2005년 말까지 사업단을 선정, 2006년 3월부터 실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고교·대학 대입모델 공동개발 협력위구성... 교육과정 개선작업도

고교등급제, 내신성적 부풀리기 책임 공방으로 극심한 갈등을 보여온 고교와 대학이 협력위원회를 구성, 2005년초부터 대입전형모델 개발과 교육과정 개선작업에 공동으로 나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월 16일 교육계, 학계,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인사 29명이 참여해 교육 현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 손봉호, 동덕여대 총

장)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산하에 고교·대학협력위원회(위원장 민경찬 연세대학부대학장),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위원장 최현섭 강원대 총장), 교육격차해소위원회(위원장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 등 3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협의회는 고교 성적 부풀리기, 시험부정 방지책과 더불어 지역·학교간 학력격차 해소와 고교평준화 보완책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고교·대학협력위원회는 고교와 대학간 정보 공유 방안과 함께 학생의 특성에 따른 대입 전형모델을 개발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각종 교육현안, 특히 대학 입학과 관련한 갈등 사안을 교육주체가 상시 협의로 해결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 협의회의 필요성은 교육현장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해 단체간 참여 의지가 엇갈려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2004년 고교등급제, 내신성적 부풀리기, 고교간 학력격차 논란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자 정부가 협의체 구성을 서둘렀고, 각 교육주체들도 이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29명(교육인적자원부 인사 2명 포함)의 위원 명단을 보면, 고

교·대학 대표를 비롯한 각계 인사가 골고루 포진해 있다. 문제는 이 협의회가 과거의 정부 자문기구들처럼 교육정책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각종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정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고교·대학 당국은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각계 중진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주로 교육발전 기본방향이나 철학 등을 논의하고, 산하의 각 전문가 위원회에서 정책개발이나 실무 중심의 문제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산하에 3개 전문가위원회를 뒀다. 우선 고교·대학협력위원회는 고교와 대학 간교육과정 연계 강화, 학생의 특성에 근거한 대입 전형모형 개발, 고교-대학간 정보 공유, 고교등급제 대안 등의 모색에 나선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대학의 입학사정관계 운영방안과 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고교장·교사 추천전형 등 전형방법 개선안 논의가 주목을 끈다.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는 학업성적 관

리의 신뢰도 제고 및 투명성 확보, 학교장학업성적 관리 책임 강화, 성적 부풀리기 방지,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부정 방지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교육격차해소위원회는 지역간, 학교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찾게 된다.

● 김 교육차관 “학생선발권 대학에 다 넘기겠다”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12월 14일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완전히 다 넘기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동계 심포지엄에서 “평소 ‘왜 정부가 대학에 관여하느냐’는 말을 많이 듣는데 대학자율 확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특히 학생선발에 있어 정부는 원칙만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점진적으로 모두 대학에 일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교간 학력차는 인정하지만 사전적 잣대로 출신고교를 평가하는 고교 등급제를 시행해서는 안되고 일부에서 요구하는 기여 입학제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본고사제도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학생

들을 학원으로 내몰아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는 수능의 폐해를 없앨 수 있도록 대학들이 수능 반영비율을 낮추고 독자적인 학생선발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어 "모집군이나 전형일정 등 대학입시와 관련한 기본계획에 관해서도 내년부터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학평가에 대해 "정부가 아니라 제3의 기관에서 대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대학에 대해 규제할 것만 법규에 정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기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위기에 처한 한국 사립대학'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전국 사립대 총장 80여 명이 참석했다.

● 사병 외국어·기술병과경력 대학학점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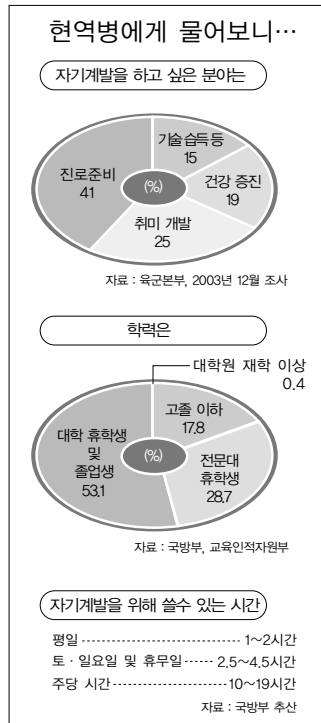
군 복무중인 장병이 외국어, 정보기술(IT) 등의 분야에 대해 소정의 교육·훈련·평가 과정을 거친 경우 이를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또 내년부터는 자동차 정비, 전기 공사 등 6개 분야 국가기술 자격 취득

시험과 관련, 동일 분야 군 경력이 있는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윤광웅 국방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12월 22일 '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민·관·군 협약식'을 갖고, 향후 이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협약식에서 16일 발족한 '군 인적자원개발 추진기획단'을 지원할 실무작업팀을 구성하고, 2005년 4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 5월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군 인적자원개발 계획은 현재 군 장병의 82.2%가 전문대 재학 이상의 학력인 상황에서 학업 중단과 자기개발 부진으로 인한 개인적, 국가적 손실이 크다고 판단,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군 인적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한 데서 비롯됐다. 안부총리는 이날 "군에서는 학습 문화·환경 조성에 힘쓰고, 교육부 등 정부 부처는 그 학습 결과를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 한 제도·정책적 지원을 하고 전경련, 대학교협 등 민간 기관은 장병의 학습여건 개선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국어, IT 분야와 각종 기술 병과에서 교육·평가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대학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내년 에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서 군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앞으로 대상 종목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전경련의 후원을 받아 3개 사단의 8개 중대를 선정해 2004년 11월부터 6개월 예정으로 외국어와 국가기술 자격 시험을 공부하는 '중대 PC방 시험 부대'를 시범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엔 발족한 추진기획단은 제대 군인이 교육 훈련 내용을 진학이나 구직을 위해 제출하면 대학·사회에서 이를

공식 인정해주는 미국의 '군 경력 교육인증서(VMET)' 제도나 군에서 핵심 IT 인력을 양성하는 이스라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예정이다.

● 대학 영재교육 전공 학과 늘어난다

오는 2010년까지 대학·교육청 등에 영재교육원 58개를 신설하고, 대학 및 대학원에 영재교육 전공 학과가 개설되며, 2007년부터 영재교육기관 평가인정제가 도입된다.

또 영재학교 졸업생은 관련분야 대학과 협약을 맺어 대학 입학 경로를 다양화하고, 대학 입에서 최저학력기준 완화를 권장해 입시 준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모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월 22일 현행 평준화 제도를 보완, 오는 2010년까지 전체 초·중·고 학생의 5%인 40만명에게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는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특목고,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 기관에서 전체 초·중·고교생의 1%인 8만명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일반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 집중이수과정, AP(Advanced

Placement)제도 등을 통해 4%인 32만명을 상대로 수월성 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 영역을 수학·과학 중심에서 예·체능, 정보, 언어·창작 등의 분야로 확대하며, 예술·정보영재학교 2개교를 추가 설립하고 교육청, 대학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재교육원을 현행 1백92개에서 2백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준별 이동수업을 2007년까지 전체 중·고교의 50%로 확대하고 영어, 수학의 수준별 트래킹(Tracking)운동을 2006년 실험 적용을 거쳐 2007년도에 도입할 예정이다.

트래킹(계열화) 제도는 몇 개 과정을 만들어놓고 학생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과정을 따라가면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고교생이 고교나 대학에 개설된 전문심화교과를 이수하면 이를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AP제도를 내년 과학고에 시범 적용한 뒤 2006년 도입하고 현재 5천명 수준인 영재교육 전문교사를 2010년까지 1만1천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영재교육 담당 교원 확보를 위해 대학교수·연구원 등이 파견 또는 겸임으로 영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및 대학원에 영

재교육 전공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 2007년부터 영재교육기관 평가인정제를 도입해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승인을 취소하고, 우수 기관은 행·재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를 활성화해 초등학교부터 우수 학생은 쉽게 일반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리치 아웃'(Reach Out)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청이나 대학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기관 지원을 위해 2010년까지 총 2천78억원을 투입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 통합국립대 4년간 8백억 원 지원

2005년 5월말까지 국립대간 통합이 성사되는 2~3개 통합국립대에 2백억 원 내외로 모두 6백억 원이 지원되며, 국·사립대 학부·단과대·대학원간 통·폐합 및 교육여건 선도대학 10~15곳에 최고 80억 원씩 4백억 원이 지원된다.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국립대는 오는 2007년까지 학부 입학정원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감축

해야 하며, 사립대는 정원 감축과 함께 정부가 제시한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충족해야만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 정착되는 2009년에는 전국 3백47개대(산업대·전문대 포함) 가운데 25.1%인 87개대(국립 8개 및 사립 79개대, 대학 38개 및 전문대 49개대)가 통·폐합 등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방안' 세부안을 확정·발표하고, 2005년 5월말까지 각 대학의 구조개혁 실적을 제출받아 7월말에 최종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를 위해 2009년까지 입학정원을 15% 감축해 8만3천명에서 7만1천명으로 줄이되 각 대학에 2007년까지 10%를 축소하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립대 통·폐합이나 연합 등을 위해 권역별로 대학 총·학장과 지역대표인사가 참여하는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사립대의 경우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해 정원감축과 교원증원을 유도하고 동일 권역내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간

통합을 촉진하며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 퇴출 경로를 규정할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1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통합을 추진하는 2~3개 국립대에 2백억 원씩 6백억 원을 2~4년간 계속 지원하고,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국·사립 대학 또는 전문대 10~15곳을 뽑아 20억~80억 원씩 총 4백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개혁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하며 사립대는 내년 전임교원 확보율을 준수해야 한다.

2004년 8월말 발표한 시안과 달라진 점은 교지·교사·수익용 기본 재산 기준 요건은 심사하지 않기로 했으며, 사립대·전문대의 경우 연도별 확보율 기준을 완화해 ▶2005년 40% ▶2006년 42% ▶2007년 45% ▶2008년 48% ▶2009년 50%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신입생 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공개하는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학술진흥재단 등의 평가기능을 통합해 '고등교육평가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한편 대학구조개혁특별법, 대

학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2월 구조개혁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 5월말 각 대학의 구조개혁 실적을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해 최종 지원 대상 학교를 7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를 위해 대입일정 확정이나 모집군 조정 등 대입전형 집행 및 관리업무를 대교협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겨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각 대학의 의견을 종합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이나 정시모집군 조정 등 세부 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본교사형 지필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의 '3불(不) 원칙' 등은 법률에 명시해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그래서 자율화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학생 정원 책정 및 편성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학에 맡겨 전문대 야간학과의 주간 개편이나 설립 후 4년 또는 6년(의대 등)이 지나지 않은 대학의 증원이 가능해진다. ■■